



도의회 광장

2021
02
제70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239 | www.council.jeju.kr ISSN 2671-9754

02

제392회 임시회



03

교섭단체 대표연설



04/07

주요 이슈



08

생생 의정활동



12

사무처 소식



제주4·3특별법 국회통과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제 제주4·3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완전한 제주4·3 해결과 대한민국 과거사 바로 세우기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의회와 도는 도민통합 이뤄야 할 의무 있어”

제392회 임시회 개회, 제주도·도교육청 등 업무보고

올해 첫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2월 22일 개회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달 4일까지 11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도민이 내린 의견은 겸허히 존중한다”면서 “그동안 도민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던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통합이라는 오직 하나 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국토교통부는 도민 의견을 존중해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화합 없인 제주사회는 미래를 향한 길에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며 “앞으로 도의회와 도는 도민통합을 이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지혜를 함께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

한 여론조사가 마무리됐다. 소중한 의견을 표해 준 도민에 감사하다”며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빚어진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안전과 복지를 밑바탕으로 하면서, 그 기반 위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꽃피워 나가겠다”며 “코로나19에서 나타난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모든 힘을 다하고, 대한민국 교육 제1의 과제인 ‘평가 혁신’의 희망도 충실히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개회사

“제2공항 여론 조사 결과 겸허히 존중해야”

제392회 임시회 개회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2월 22일 “제주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며 “국토부는 도민의견을 존중해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좌남수 의장은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올해는 민생을 우선 회복시키고, 갈등이 아닌 도민화합을 통해 희망적인 미래 도약을 위해 한 해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좌 의장은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도민들께서 내주신 의견은 겸허히 존중한다”며 “그동안 도민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던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통합이라는 오직 하나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좌 의장은 “국토부는 도민의견을 존중해 책임 있는 정책결정을 요청한다. 도민화합 없인 제주사회는 미래를 향한 길에 단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다”며 “앞으로 도의회와 도는 도민통합을 이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지혜를 함께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지난 1년 도민의 삶은 참으로 처절하고 혹독했다”며 “지난 한 해 제주경제는 마이너스(-) 3% 성장을 면치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경제의 핵심인 일자리도 도내 실업률은

5.2%로 전년대비 2.5% 상승해 실업자는 1만명이 증가한 2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도내 서비스업생산 -10.4%, 소매업 판매 -26.9%로 전국 시도 중 전년대비 감소폭이 가장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좌 의장은 “타 지역보다 코로나와 같은 외부충격의 영향이 커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제주경제와 도민들이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 상태로는 안된다”며 “재난지원금만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빠르고 강한 특단의 경제회생 백신이 필요하다”며 “우선 각종 조례나 지침에 우리 스스로 발목잡는 규제는 없는지 과감히 규제 완화조치라도 속도감 있게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에 분야가 따로 없고 도와 의회가 따로 없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여건과 국비확보도 비상”이라며 “재정투입의 경제회생 효과를 감안해 제주형 뉴딜사업을 비롯한 국비확보 신규사업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70여년간 도민들의 맺힌 한을 풀어줄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만이 남아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법개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수상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수상

단체상 장려, 개인 대상 강민숙 의원, 장려 오대익·이경용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의정 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제주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에서 김태석 의원(노형갑,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도 다수의 수상자를 냈다.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오대익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과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국민의힘)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와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로 장려상을 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조례를 대상으로 연구활동, 창의성과 시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

의 경우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개인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한 강민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제주도의 향토문화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분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들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오대익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대면 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수학습이 이뤄지는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경용 의원이 발의한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에 대해서는 제주의 문화경관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규정으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춘 눈높이 조례라고 평가했다.

좌남수 의장은 “11대 의회가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인데 대한 결과들이 좋게 나타나 기쁘다”며 “올해도 지역발전과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2월 19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에서 개최됐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2공항 여론조사, 정쟁으로 갈등 부추겨선 안돼”

김희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월 22일 열린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주 제2공항, 코로나19 방역대책, 제주특별법 개정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우선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번 전체 도민 여론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그 뜻을 모아 정리해나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공론

조사였다고 평가한다”며, “찬성·반대가 말하는 숫자에서 벗어나 도민의 걱정·불안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제주형 뉴딜을 통해 6조 이상을 투자한다고 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발표 시점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사업을 기획했는지, 어디에 얼마가 투자되는지 등 상세 내역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제주형 뉴딜이 제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이 이해하기는 커녕,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와 관련해서도 “제주도정이 경

제·방역 두 가지를 챙길 의지가 부족해 경제보다 방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성적표는 사실 초라하다”며 “지사가 뒷전으로 둔 민생경제는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선 “또다시 ‘과제 발굴식’ 제도개선으로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 대동제 등 행정체제 개편, 주민총회, 의원정수 조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제주만의 고유

의 자치제도 설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 갈등해소 위한 범도민협의체 구성 제안”

오영희 의원,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영희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월 22일 열린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 경제, 제주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의회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냈다.

오 의원은 우선 “지난해 제주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크게 위축돼 -3% 안팎의 성장률을 보였다”며 “원희룡 도정이 신성장산업 분야 업종에 조세 지원 대상을 신설·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시책

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제도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성장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규모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필요한 경우 민간분야 투자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공항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통계 수치를 근거로 ‘승복’을 요구하는 모습은 도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며 “갈등해소를 위해 실시된 여론조사 이후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우려하는 여론이 크게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에 대해 “도민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제2공항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범도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제2공항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원 지사가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만을 발표한 것은 지나치게 소심한 대응이 아니냐”며 “국토부가 전격적으로 제2공항 사업 무효화 결정을 내리면 지사께서는 수용하실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에게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4차 재난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제주세무서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한시적으로 2018~2019년까지 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분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 지급액을 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공백 피해 대책 세워야”

오대익 교육의원,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대익 교육의원은 2월 22일 열린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공백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교육부문 반영이 미흡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진이 도

시계획·건축·교통 전문가로 구성돼,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비전과 부합하지 의심스럽다”며 “제주의 성장 동력에서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내실있게 제시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코로나,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새로운 교육시스템과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미래형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 의원은 “제주지역의 만5세까지 유아 중, 1~4세까지의 유아는 거의 100%가 어린이집이나 유치

원에 취원하고 있어 관리가 용이한 편이지만 만 5세 어린이는 93.5%만 취원하고 있어 미취원 유아 430여명이 어디서 어떤 교육이나 돌봄을 받고 있는지 감 잡힌 상태”라며 “조속한 소재파악과 함께 이 아이들이 관리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특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국제학교 추가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학교교육에 있어 등교·대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돌담하나, 동백꽃 한송이, 바람 한줄기에도 살 떨렸던 통곡의 70년 세월!
유족과 도민 모두가 하나되어 함께 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이슈

제주특별법 개정 초안 마련...4개 정책 방향 분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T/F, 한달간 도민의견 수렴



행정시장 임기를 기존 2년에서 기존 4년에서 늘려 직선제를 도입하고, 영리병원 도입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도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단장 이상봉)는 2월 22일 의회 TF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공개했다.

정책분야별 방향은 ▲총칙 '도민복지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 ▲특별자치분권 강화 '도민 자기 결정권·도의회 기능·정책 기능적 분권·자치재정권' ▲국제자유도시 조성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 등으로 분류해 110개 제도개선 과제를 정리했다. 신규 과제는 약 60%에 달한다.

이날 발표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행정

시장 임기를 4년으로 해 도지사 임기와 같게 하고 행정시장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임은 3회로 제한된다.

아울러 그동안 도민사회 갈등을 불러왔던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영리병원)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내 조항(제307조~제313조)은 삭제됐다.

이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초안을 발표한 이상봉 단장은 "특별법 조항과 관련해 도민 갈등이 표출되는 부분을 깔끔하게 해소하기 위해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교육위원을 도의원 정수에서 제외하고, 교육위원과 교육감 피선거권 규정을 기존 '5년 경력에서 '3년 경력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교육위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경력을 교육 경력으로 인정토록 규정돼 '학부모 교육위원'이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돼 교육위가 도내 교육·학예에 관한 최종 심의기관이 된다.

제주도의원이 교육위에 참여하지 않으며, 교육의원도 제주도의회 상임위에 참여하거나 본회의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도의회는 3월 19일까지 한 달간 도민 의견 수렴 기간을 운영하며, 도의회 홈페이지나 이메일 (obama2@korea.kr)을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홍보와 함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도민 설문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다음 달 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4·3특별위원회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진행사항 청취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열)은 2월 16일 제5차 특위회의를 개최하고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사일정 및 법안주요 쟁점사항을 비롯해 향후 대응 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국회 진행사항 보고에서 강철남 위원장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집행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길"을 당부하며, "우리 의회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 위원들은 집행부에 "4·3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지금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

동행동, 4·3범국민위원회, 재경4·3유족회 등 시민단체들의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제주도민과 4·3유족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만큼 의회도 전국 의원 네트워크를 통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2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 도입 검토해야”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장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은 1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 '2050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 포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지난 14일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인 '2050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로 지금의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실현을 위해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 또는 '제주형 탄소감축인지예산제도' 도입을 강

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제주는 이미 10년 전부터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지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둔감한 실정"이라며 "제주형 그린 뉴딜 및 디지털 뉴딜 사업의 발굴 단계에서부터 기후위기 관련 영향 및 탄소감축인지예산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난시 급식중단 피해농업인 지원” 법제화

포스트코로나대응 특위 차원 대응...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따른 급식 중단으로 인한 계약재배 농가의 피해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등 재난 상황에서 친환경급식 계약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

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1월 26일 밝혔다.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재난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이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인 송영훈 의원(사진·남원읍)이 대표

발의한다.

송영훈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해 급식 계약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급식은 제주지역 친환경농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비처인 만큼 재난상황에서도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전략 심층 토론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제주도의회 세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는 2월 19일 원주시 오크밸리 빌리지센터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국내 지방자치 석학들과 함께 추진전략 모색을 위한 심층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지난 1월 7일 도의회 T/F를 구성하여 과제발굴을 선도해왔다"며 "특별자치 강화, 국제자유도시 조성,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를 큰 축으로 110개의 과제를 도출하였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하면서 주요 과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기우 지방분권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하대 법전원 교수는 "제주특별법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수준의 전부개정 수준으로

가야 하며, 자기결정권을 확실히 수행하고, 국세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치입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완전한 자치권 획득을 추구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남티롤의 자치사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자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정순관 순천대 교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전국적인 학술대회에서 독자적인 세션을 구성하여 논의하고 공론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놀라운 사실"이라고 평가한 뒤 "개발의 관점에서 조성의 관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은 가치에 대한 전환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그동

안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특별함이 상실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번 세미나에서 보여준 도의회의 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역량은 특별함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중심 특별한 주민자치 실험 성과물 주목

민·관 공동 애월읍 종합발전계획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진한 '주민중심의 특별한 주민자치'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강성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지역구: 애월읍)은 2월 18일 '보충성의 원칙'(지역의 문제는 지역문제를 잘 아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에 따라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이후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주민들이 직접 설계한 '애월읍 종합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민·관 공동으로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강성균 의원은 애월읍 발전계획에 대해 "지역의 현안 해결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지역발전 마스터 플랜을 주민 스스로 세우고 행정계획화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발전계획은 그동안의 논의가 집적된 성과물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현안 해결과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도

내·외로 주민들과 광폭 행보를 이어왔다. '주민 중심 지역발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 대토론회'(18.11.13.)를 시작으로 안동시 등 산지경매 운영 지역 방문, 애월항의 여객기능 도입을 위한 국회 방문과 해양수산부 차관 면담 및 주민건의서 제출, 애월읍민 130인 원탁토론회 개최, 애월읍 26개 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쳤다. 애월읍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비전은 '주민이 편리하고, 생태와 역사가 살아있는 풍광(風光) 애월'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6개 정책분야 44개 사업을 제시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강성균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지역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보고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며, "모든 계획은 제도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조례안 처리를 마무리 짓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을 포함

한 발작물 산지경매시스템 도입, 이와 연계한 애월항 활성화 계획, 관광객 유치와 주민상생을 위한 새별오름과 연계한 제주정원 조성 등 발전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권 확보 제도 마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은 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실시했다.

좌담회는 지난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회협회(회장 허순임)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실태 조사보고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과 처우 개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좌담회를 개최한 양영식 위원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종사자 입장에서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 추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병을 갖고 있는 도민의 건강수명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금번 조례에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실태조사, ▲고혈압·당뇨병에 관한 주민교육과 홍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를 향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편의증진 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이 담겨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이승아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규칙적 치료 및 관리, 금연을 통해 심장질환, 뇌졸중, 제2형 당뇨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80%가 예방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예방지원을 높임으로써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월 16일 입법예고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산림의 기능 및 활용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에 발맞추어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제정되는 조례는 산림복지서비스의 정의와 산림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송 의원은 “산림복지서비스가 제주도민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기본 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특히, 수급자 및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도민 모두가 보편타당하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며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양영식·고현수·김황국·김용범·김경미·오영희·강성민·김희현·송영훈·문종태·고은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9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고!고! 챌린지’ 동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탈(脫) 플라스틱 고!고!챌린지」에 동참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

한 캠페인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탈(脫) 플라스틱 고!고!챌린지」캠페인은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거부하고’ ‘해야 할 한 가지를 실천하고’에서 따온 말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 다짐을 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대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이사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참여한 강성의 위원장은 “플

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기를 사용하고” 표어를 만들어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머그컵,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면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겠다고 약속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다음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태운 상임대표 그리고 경기도의회 김지란 의원을 추천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드림타워 방문, 카지노 영업장 점검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 면적 변경 허가 신청 의견 처리 차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의원)는 2월 23일 임시회 안건으로 ‘엘티카지



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올라오에 따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드림타워를 방문, 카지노 영업장을 살펴봤다.

드림타워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존 카지노의 드림타워 이전을 택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에 있는 엘티카지노를 제주 드림타워로 옮기는 방식이다.

문제는 영업장소 변경과 더불어 카지노 규모를 1175㎡에서 5367㎡로 4.5배 늘린다는 점이다.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엘티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9일 제주도에 카지노업 소재지와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도의회의 의견 제시가 이뤄지는 건데 해당 상임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3월 2일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지하 6층, 지상 38층 규모의 169m 높이고 기존 제주 최고층인 롯데시티호텔(89m)보다 2배 가량 높다. 연면적도 30만 3737㎡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1.8배에 이르는 제주 최대 규모다.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 이전 최종 허가까지 받으면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드림타워 카지노를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동물복지계획 수립, 반려문화 조성

제도적 장치 수립 정책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당, 비례대표)이 지난 제주동물보호센터 방문에 이어 동물학대 방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관리 등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반려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월 18일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관리 현황을 보면 2019년이 7,767마리가 입소되고 4.95%(385마리)반환, 분양 및 기증은 13.96%(1,084마리), 57.27%(4,448마리) 안락사되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6,642마리가 유기동물로 입소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제주동물친구들’ 김미성 대표는 동물판매 규제와

중성화 수술에 대한 필요성, 동물등록 의무화에 따른 법규제에 대한 공익방송 캠페인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읍면동지역의 동물들은 지역주민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동물등록과 중성화 수술없이 키우고 사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새끼를 포함한 5-6마리의 반려동물이 한꺼번에 포획되어 동물보호센터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계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지역주민들의 경우 보호센터로 이송 후 안락사되는 걸 모른다면서 사육포기동물에 대한 인수보호제의 잘못된 관행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현재 행정시 1명의 공무원이 동물복지를 전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동물복지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는 제주도와 충남 등 일부 밖에 없어 동물복지 정책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동물복지 정

책을 펴기 위해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주요 정책 사업 점검 및 대안 발굴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소속 전문위원 및 정책 연구위원들과 함께 2월 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1년 농·수·축·경제 분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월 중 예정되어 있는 제주도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축·경제분야의 상임위 소관 주요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워크숍 토론 주제를 농축산업, 해양수산, 경제의 3개 분야로 설정하고 해당 전문 정책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후 의원들 간 자유토론으로 금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각 분야별 의정활동의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장과 상임위 위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농어업인 및 영세 소상공인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제주 발전을 위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차원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라고 하였다.



일자리 정책 창출 2차 워킹그룹 발대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주최로 2월 8일, '일자리 정책 창출과 지원을 위한 2차 워킹그룹' 발대식을 가졌다.

일자리 정책 창출과 지원을 위한 2차 워킹그룹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창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일자리 정책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의회 차원의 비대면 일자리 정책 창출과 지원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발대식에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을 비롯해, 2차 워킹그룹을 주관하고 있는 김경미 의원, 제주자치도 일자리과 및 미래전략과, 더 큰 내일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연구원, 여성가족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2차 워킹그룹은 앞으로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창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워킹그룹을 주관하고 있는 김경미 의원은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에 이은 2차 워킹그룹 발대로 "제주 사회에 필요한 비대면 일자리를 더욱 확산시키고, 이에 필요한 정책 창출과 지원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워킹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2월 15일 입법예고했다.

대표 발의하는 강시백 위원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가. 적용범위, 도교육감의 책무,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안제5조), 나.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직거래 활성화 지원, 실태조사, 홍보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안제10

조), 다. 표창,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제12조)등으로 구성되었다.

조례를 제정하는 강시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편 강시백 의원은 작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도내·외 업체 계약 수주 현황을 점검하면서 제주시·서귀포시 지역 간 상당한 수주 격차 발생을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의 지역 간 계약 수주 격차 해소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조례는 강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균·

강연호·강종룡·김장영·김창식·부공남·송창권·양병우·오대익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국 최초 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부의장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연호 의원은 2021년 도교육청의 성인지예산 사업수(예산규모)는 41개(473

억원)이며 전체 교육비특별회계 대비 비중은 상향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성인지예산서의 지표연계 미흡',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반영 미흡', '남여 수혜를 동등하게 하는 기계적 성평등 관점'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연호 의원은 양성평등 시책이 예산제도와 연계해서 제대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양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관련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정책을 뒷받침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마련되

지 않아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 성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 △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 계획수립 △ 공무원 및 주민참여 교육 △ 분석 및 평가 △ 성인지 예산제 심의 등이 포함되고 있다.

강연호 의원은 조례 제정을 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생생 의정활동

의원연구모임

제주관광 통합브랜드 관리 왜 필요한가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자문위원 위촉 및 제2차 토론회

지난 1월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제주관광 미래성장 포럼 대표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2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창립목적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제주관광의 포스트코로나 전략 모색을 위한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영희 대표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제주관광정책의 중요한 정책사안에 대해 필요한 자문과 제안,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2월 제2차 토론회는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부터 ‘포스트 코로나 제주관광전략 : 제주관광 통합브랜드 관리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오영희 대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관광트렌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관광에 있어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최고의 기회이다.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시점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주의 강점을 살린 제주다움을 더욱 강화하고 제주만의 특화된 관광브랜드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자 했다”고 토론회 기획의도를 밝혔다.

제주관광 미래성장포럼은 오영희 대표(국민의 힘, 비례)를 비롯해 양병우 부대

표(무소속, 대정읍), 고태순(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이경용(국민의 힘, 서흥·대륜동), 김창식(교육위, 제주시 서부), 강연호(국민의 힘, 표선면) 6명이 활동하고 있다.



제주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 위한 정책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대표의원인 정민구 부의장이 2월 4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를 주관한 정민구 부의장은 “현대 사회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업무형태인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프리랜서들이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현행 법령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오늘 정책간담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조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일자리 유형 변화 등으로 프리랜서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다.”라면서, “서울이나 경기도 등에서는 이미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어 우리 제주에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입장을 밝혔다.

정책간담회에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김경미 의원을 비롯, 제주대 강사인 김석운 박사,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고의경 프리랜서 등이 참석해 프리랜서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타 시·도 사례 및 조례 제정방향에 논의했고,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경청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소속 회원들의 조례 등 입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민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형 해양수산 뉴딜사업 제도 및 과제발굴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은 송창권 대표의원 과 문경운 의원, 고용호 의원, 이승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형 해양수산 뉴딜 정책 과제발굴을 통한 제주해양수산업 육성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는 2월 1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코로나19 이후 제주형 뉴딜사업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정책발굴을 위해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코로나19 이후 해양수산업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분야를 접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제주해양수산 뉴딜정책 과제발굴이 심도 있게 이뤄졌다.

이를 위해 제주형 해양수산 뉴딜정책에서는 총 18개의 과제를 도출했고, 분야별로 보면 디지털 뉴딜분야에 ICT기반 제주 스마트양식 시스템으로 전환, 수산물 이커머스 플랫폼 시스템 마련 등 5개 과제, 그린 뉴딜분야는 양식장 배출수 통합관리 체계 구축, 해양쓰레기 스마트 처리시설 마련, 소라 TAC제도의 내실화 및 가격안정도모 등 8개 과제, 안전망 강화분야는 해양 교육 및 문화 산업의 활성화, 해녀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귀어인 정착 지원을 통한 어촌 활성화 등 5개 과제를 검토했다.

향후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 전문가, 어업인 단체, 바다환경관련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주해양수산업 현실 여건에 맞는 제

도개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으로 우리 도 제주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큰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소개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지침 수립 조례 개정안

오영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환상자전거 길이 234km가 개통되어 있다. 이 길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까지 국비를 포함하여 358억 원이 투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정표, 일관성 없는 자전거길, 횡단보도와 미연계 등 자전거도로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었다.

자전거도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2020년에도 관계 동호인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제389회 도정질문에서도 자전거도로의 개선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 바 있다.

조례개정안에는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지침을 수립하는 내용과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도민

의 권리와 책무 등이 추가되었고, 자전거 교육 실시 내용 등이 추가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오영희 의원은 “자전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줄 수 있는 스포츠로서, 제주웰니스관광에 많은 기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개선에 따른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송창권, 양영식, 강충룡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다.

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한 조례안

김경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2월 1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경학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가. 도교육감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등, 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5조), 나. 실태조사, 교직원 역량강화,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다. 유관기관 간 협력, 비밀준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0조)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김경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스트레스로 인해 제주 학생들 중에서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게 되어서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조례는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의·강철남·고현수·김경미·송영훈·양영식·오영희·이상봉·정민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도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기관 내 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2월 8일 「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성의 의원은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불안감이 크다고 하였다. 특히 작년(2020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전국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966건으로 연간 1,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도 85건이나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성범죄의 51%인 2,027건은 불법 촬영 범죄로 불법 촬영의 사각지대인 공중화장실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성의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져 사이버상으로 유포되거나 저장, 전시되어 2차와 3차 등 더 큰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 △ 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 신고체계의 마련 △ 실태조사 △ 협력체계 구축 △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안전한 화장실의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제주문화관광해설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2회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지난달 제주 문화관광해설사협회와의 간담회에 이어 제주도 관광부와 처우개선 방안과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2월 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마련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지난 제주문화관광해설사 대상 직업환경 실태조사(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여성 경력단절을 겪거나 가사 돌봄에 놓인 상황에서 문화관광해설사에 진입한 경우가 많아 여성일자리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제주특별자치도문화관

광해설사협회는 2001년부터 2만원의 활동비를 시작으로 3만원, 3만5천원, 4만원,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5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위를 자원봉사자로 하고 있으나 법적 근로자의 개념이나 판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일선 관광지 배치·타이트한 활동 관리·연 24시간 보수교육 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의 종속성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래서 근로자에 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에 대한 보장과 활동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의견을 피력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최일선에서 제주를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제주 관광산업과 제주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나 처우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한 해설사는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제2의 직업 창출과 일

자리 창출 분야로서 관광정책과 더불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활동실적을 촘촘히 점검하여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내용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함께합시다

신기한 제주어 ②

그늘우다

(동사) 잘 보살펴준다

<예문>

- “오늘은 하르바지 식재난 인척 들어오라이”
- “스무실이 막 주르져신디예. 무사 곡 식궐 흥염신고양?”
- “조상님 은공도 뜬내우곡 주손덜 잘 그늘와 주십서 흥는 거여”

‘도의회 광장’에서는 2021년부터 양전형 님의 ‘제주어용례사전①’에 실린 제주말이 600여 예문 속에 쓰이는 용례를 게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하르바지 : 할아버님
- 식계, 제스, 지스 : 제사
- 인척 : 일찍
- 인척생이, 일찌갱이, 일찍생이 : 일찌거니
- 스무실 : 사무실
- 주르져신디예 : 바빴는데요
- 무사 : 왜
- 흥염신고 양 : 하는지요
- 뜬내우다, 뜬내우다, 뜬넵다 : 잊었던 것을 생각해 내게 하다
- 주손덜 : 자손들
- 그늘우다, 거늘우다 : 보호하여 보살펴 주다
- 주십서 : 주십시오



청탁금지법 Q&A



Q

직무관련자인 공직자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예약 또는 공공기관 소속 콘도형연수원 예약을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제공 등 일체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므로 골프장 및 콘도 예약 편의 제공도 금품등에 해당되고, 이를 부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에 대한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사안과 달리, 민간골프장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는 경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한 청탁이 아니므로 부정청탁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 기	주요처리안건
계	총136일	총136일	
2월	제392회 임시회	2.22.(월) ~ 3.4.(목) (11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원 선임 •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3월	제393회 임시회	3.17.(수) ~ 3.24.(수) (8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94회 임시회	4.20.(화) ~ 4.30.(금) (11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95회 임시회	5.20.(목) ~ 6.1.(화) (13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96회 제1차 정례회	6.15.(화) ~ 6.30.(수) (16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97회 임시회	7.14.(수) ~ 7.21.(수) (8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9월	제398회 임시회	9.7.(화) ~ 9.14.(화) (8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99회 임시회	10.12.(화) ~ 11.3.(수) (23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11.15.(월) ~ 12.15.(수) (31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2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01회 임시회	12.17.(금) ~ 12.23.(목) (7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를 구성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도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아래와 같이
도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합니다.

기간 : 2021. 2. 22.(월) ~ 3. 19.(금)

접 수 : 의회 홈페이지 의견수렴 배너 및 이메일(obama2@korea.kr)

문 의 : 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064-741-2363)

제주 교육에 던지는 화두-제주미래교육비전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많은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살아가는 능력으로 협업능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을 꼽고 있다.

그런데 미래세대도 현 세대와 마찬가지로 풍족한 삶을 누리고 동시에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교육, 즉,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키우고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핵심역량들에 대한 이해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바뀌고 있는지, 학교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동의할 수 없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학생수가 급감하여

학습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교육체제로 재구조화하는 것, 둘째, 미래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 변화의 속도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변화를 촉진하고 선도하는 것, 셋째, 새로운 사회와 경제구조에 따른 교육격차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 복지 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에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넷째,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는 미래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교사의 역할과 학교 교육의 기능 및 모습에 대한 정의 내리기 등의 미래교육 과제들이 던져져 있다.

이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 미래교육의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가올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교육시스템과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하며,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패러다임을 만들고 지능정보기술의 교육적 활용 방안이 이르기까지, 제주미래형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추진하는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과정에 제주교육의 미래비전을 잘 녹여내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추진과제들이 잘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정책들을 통합하고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추진 전담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제주미래교육에 대한 거대 담론을 이룸으로써 올 한 해 제주교육이 미래교육의 반석을 놓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정민구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 도입을 촉구한다



가슴 아프게 한 아이를 잃은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의 현실을 '인지'하게 했으며, 그 '인지'를 시작으로 사회의 여러 영역을 바꿔내는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렇듯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고, 또 알게 됨으로써 그것을 바꿔내려는 노력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첫 시작점은 바로 '인지'이다. 사전에서 '인지'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앎'으로, 그리고 '영향'은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인지'와 '영향'은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이름 붙여진다. 대표적인 것에는 성인지예산제도와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있다.

이러한 '인지'예산, '영향평가제도의 영역이 최근 '기후위기'와 '탄소감축'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21년 지사 신년사에서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경기도는 '경기도형 탄소감축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필자 또한 '인지'의 제고를 위해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미 10년 전부터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오히려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둔감한 실정이다. 필자가 2020년 9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제주형 그린 뉴딜 및 디지털 뉴딜 사업의 발굴단계에서부터 기후위기 관련 영향 및 탄소감축인지예산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

다고 촉구한 바 있으나, 그 걸음은 상당히 더딘 실정이다. 최근 수립 계획이 발표된 '2050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도 이와 관련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기후위기'가 아닌 '기후변화'로 밖에 인지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다 획기적인 정책의 제안과 도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설계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는 달라질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실현을 위해 '제주형 탄소감축인지예산',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또한 힘을 모아나가고자 한다.

강성민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직의 흥망을 결정하는 키맨은 참모다!



참모란 누구인가? 조직을 계선 조직과 참모조직으로 나누지만 참모조직에 있는 사람만이 참모는 아니다. 어떤 조직에 속했더라도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는 1인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참모라고 할 수 있다. 참모는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이 비껴갈 수 없는 역할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늘 참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중요성을 잊고 지낸다. 국가경영이든 사업이든 그 흥망성쇠는 참모에 의해 결정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에겐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있었고, 예수님에겐 수제자 베드로, 사도 바울이 있었다. 이들의 행동과 말씀이 인류 보편의 종교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참모들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서 참모들의 중요성

을 이야기 하고 싶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을 준비를 하던 시기인 1994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46년 이래 최초로 상·하원을 모두 잃을 정도로 참혹하게 대패했다. 중간선거 대참패 이후 빌 클린턴은 지옥에서의 탈출을 시작해야 했고, 이때 딕 모리스를 선택했다. 빌 클린턴은 "딕 모리스는 나에게 항상 직설적이고 정직했다.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가리지 않고 말했고, 가능하면 나쁜 소식을 먼저 이야기했다." 최근 중앙정치나 지방정치에서 진정한 참모들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진정한 참모는 1인자의 지시를 무조건 추종하는 자 여서는 안 된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들어낸 참모 루이 하우는 루즈벨트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악담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악담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세계대공황의 위기를 뉴딜정책으로 이겨낸 존경 받는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참

모 루이 하우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하우에게 여론을 전달했고, 이를 통해 하우는 대통령에게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었다. 또한 하우의 하나뿐인 야심은 루즈벨트가 가는 길을 잘 인도해서 정상에 오르게 하는 것이었기에 진실을 제대로 알릴 수 있었고, 루즈벨트는 현명한 행동과 정책판단이 가능했던 것이다.

참모의 '예스'는 먹기 좋은 독약이다. 참모의 '노'는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몸에 좋은 양약이며, 1인자를 썩지 않게 만드는 항바이러스제이다. 또한 1인자의 자만심을 무너뜨리고,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원동력이다. 이것은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중앙정치나 지방정치에서 딕 모리스나 루이 하우 같은 참모를 기대하기가 이리 어려운 일일까?

이경용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보다 질?' 영어교육도시 중단은 안될 말



동심동덕(同心同德), '같은 목표를 위해 다 함께 힘쓰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다. 코로나19 위기로 전 국민이 힘든 이 시기야말로 위기 극복을 위해 한 뜻의 마음을 내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대정에 위치한 영어교육도시는 동심동덕의 마음으로 시작된 국제사업이다. '글로벌 교육허브 제주'라는 하나의 목표로 토지 확보부터 국제학교 개교까지 온 마을 주민, 정부 부처,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교육청까지 합심하여 시작된 사업이다. 그렇기에 영어교육도시의 사업 완성을 기다리는 대정읍 주민들의 열망이 매우 뜨겁고, 전체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마무리 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

제주지역통계에 따르면 대정읍 인구는 2010년 1만 7000명까지 감소했다가 첫 학교가 개교하던 201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2만3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실제로 대정읍은 10년 전과 비교 했을 때,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 젊고 활기찬 마을이 되었고, 보성초등학교 증축, 대형마트 개장, 대정읍사무소 신청사 신축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 19로 해외유학 대신 제주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2020년도에는 78.4%라는 역대 최고 충원율을 달성했고, 입학경쟁률이 2:1 이상 기록하면서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을 일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시점부터 해외 리더니(귀국학생)도 크게 늘고 있어서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영어교육도시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에 남은 학교부지에 이중언어 교육 등 차별화된 신규 국제학교를 유치하여 다양한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학교에 공급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청년은 국제학교라는 새로운 일자리에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서두에 말한 동심동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영어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JDC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규 국제학교를 유치할 것을 당부드리고,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위임받은 승인권자임을 되새겨 영어교육도시를 바라봐주길 바란다. 영어교육도시가 당초 목표대로 7개의 국제학교를 설립해 '글로벌 교육허브 제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길 기원한다.

양병우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결핵 관리를 위한 정책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월 17일(수)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결핵 관리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를 주관한 오영희 의원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대비 없는 감염병의 접근은 수많은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가 버렸다”면서, “본 의원이 대한결핵협회 제주지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결핵 또한 제2급 감염병으로써 우리 제주가 전국 6번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주도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향후 우리 제주에 결핵치료 전문기관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대진 의원은 한센병의 경우 제주에서 신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관련 조례 및 전문병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같은 제2급 감염병인 결핵은 제주에서 신환자가 매년 3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결핵관리를 위한 조례 및 결핵치료 전문병원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이해정 연구사는 현재 중앙주도로 실시되고 있는 역학조사사가 2022년부터 지자체 주도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대한결핵협회 제주지부 장경진 차장은 협회가 제주지역에서 어르신 및 노숙인, 취약계층,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등 대상으로 약 3만여 명의 결핵검진을 통해 결핵환자를 발견하여 관리함으로써 도내 결핵전염원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개선 필요성을, 제주대병원 임봉실 결핵전담 간호사는 영상을 통해 현장에서 느낀 점과 함께 결핵전담관리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죽음 교육의 필요성과 시대성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제주시 노형동을선거구)은 오는 2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죽음교육의 필요성과 시대성”을 주제로 ‘죽음교육의 시대적 요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결정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적용해 안전하게 진행됐다.

세미나는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만연된 죽음공포 극복을 위해 죽음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시대성을 전문가 강연을 통해 제주도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둘째, 제주도민들에게 체계적인 죽음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죽음교육 전문가와 함께 죽음교육 진흥 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정현채 명예교수의 “죽음은 소멸인가, 옮겨감인가?”에 대한 발제에 이어

오진탁 교수의 “우리 사회에 죽음 정의(定義)가 있는가?”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으며 토론 좌장에는 윤용택 교수가 맡아 세미나 현장에서 토론자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현장감 있는 세미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비대면 온라인 참석 예정자들이 질문한 세미나 주제 관련 질문도 토론에서 함께 다루지며 진행됐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제주의 자치단체들조차 코로나19 방역행정에만 치중하는 면이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만연된 죽음공포 극복을 위한 어떠한 행정 노력이 없었다며 끝이 보이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제주도민들에게 죽음교육 진흥 방안과 더불어 체계적인 죽음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문

국민 여러분,

이제 제주4·3은 연대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실천하겠습니다.

특별법 조문별 실천계획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갑니다.

제주4·3이 비극을 넘어 인권과 정의의 역사를 여는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여러분,

73년이 흐른 지금도 제주에서는 일 년 열두 달 온 마을사람이 상주가 되어 제를 올립니다.

냉전과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없이 많은 무고한 도민이 희생됐고, 억울한 옥살이로 고통 받았습니다.

가족의 품에 안기지 못한 희생자가 많기에 기다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의 열망과 염원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오늘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는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로, 국민 모두에게는 평화와 인권의 숨결을 새로이 느낄 수 있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야를 비롯한 정당과 정부,전국 지자체와 의회, 교육청, 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분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제주 4·3을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일으켜 세워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임중

좌남수

원희룡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사무처 소식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회에 김형미 연구위원 임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26일자로 개방형 직위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4급 상당)에 김형미 문화관광체

육위 정책연구위원(사진)을 임용했다. 신임 김 전문위원은 향후 2년 동안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회 소관의 각종 조례 제·개정과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